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430
----------	-------

발의연월일 : 2023. 7. 25.

발 의 자 : 민병덕 · 서영석 · 권철승
민형배 · 홍성국 · 한병도
강득구 · 조오섭 · 이용빈
이동주 의원(10인)

제안이유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재난피해 공동주택의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시설 등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재난의 구호 및 복구비용 선지급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재난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저해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함
(안 제66조제3항제2호 등).

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며,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하여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 및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

제66조의2제1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복구비 산정 중인 피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② (생략)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 및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
3. ~ 4. (생략)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8. ~ 9. (생략)	9. ~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	제66조의2 ①----- ----- ----- -----

<p>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 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u>지급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u></p> <p>③·④ (생략)</p>	<p>----- ----- ----- ----- ----- -----지 <u>급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p>③·④ (현행과 같음)</p>
--	---